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8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문평공원 내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했다.

\* 3.20.(금), 대전 대덕구 내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명피해(사망14명, 부상60명) 발생

합동분향소는 사고 직후 대전시청 내에서 운영되다 4월 7일(화) 문평공원으로 이전하여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문은 49재(5.7.)를 지내고 5월 9일(토)을 끝으로 분향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마지막 조문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3.20.)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32개 기관 706명) 운영을 통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3.21.)하여 현장책임자 지정, 유가족에 수습 상황 설명, 원인규명에 유가족 참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끝까지 책임지고 소홀함 없는 지원 등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재난현장지원관을 현장에 상주시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였고, 1:1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겼다.

장례·치료비에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등 긴급구호를 위해 선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아울러, 현장 합동 감식에 유가족을 최초로 참여시키고, 언론 브리핑 내용을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는 등 소통에 노력한 결과, 유가족들이 정부와 대전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해수습과 장례가 잘 마무리 되었고, 사측과의 원만한 보상협의와 산재보상금도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과 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4월말부터 9주간에 걸쳐 화재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 중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수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잘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조문 후 유가족과 만나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6330)
		담당자	사무관	김종훈 (044-205-6340)

